

일본 정부·여당 농업개혁안 발표

- 향후 5년간 집중 개혁 -

■ 향후 5년간은 “개혁집중기간”

- 민간 지식인으로 구성된 규제개혁회의가 5월에 정리한 농업개혁안을 제출받은 일본 정부·여당은 향후 5년간을 “개혁집중기간”으로 하는 농업개혁의 전모를 결정하였다.
- 쌀값 유지를 위한 생산조정의 폐지를 포함하여 영세농가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 온 농정의 전환을 추진하고 관련 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JA全中の 축소

- 규제개혁회의에서는 JA全中(한국의 농협중앙회에 해당)의 지역 농협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사 권한의 “폐지”를 주장했으나 자민당 등의 반대를 수용하여 최종 결정은 경영 지도권 등의 "폐지"는 표시하지 않고 "중앙회 제도에서 자율적인 새로운 제도로의 이행"라고만 기재하여 역할의 축소 및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 또한 JA전농에 관해서는 규제개혁회의가 주식회사로 강제 전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민당은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토록 한대로 JA그룹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내용으로 변경했다.
- 그러나 JA전중이 지역농협의 경영을 총괄하는 구조를 종료하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으며, JA전농을 주식회사화하는 방향도 확정했다. 지역농협은 국가의 보조금이나 JA전중의 보호에 의지하지 못하는 반면, 각 농가를 위한 독창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지역농협의 자립 여부가 중요해진다.

■ 일본정부의 농업 개혁안과 목표

항 목	목 표
쌀 생산조정의 폐지	쌀 생산의 자유화
JA전중의 권한 축소	지역농협의 경영 자율성 제고
JA전농의 주식회사화	합리화를 통해 농가에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
농업생산법인의 출자규제를 완화	기업과의 연대를 촉진
농업위원회에 전문가 등용	농지의 확대를 촉진
향후의 과제	목 적
농협에서 금융부문을 분리	본업인 농업에 경영자원 집중
기업의 농지소유 (50%초과 출자)	기업의 본격 참여로 규모화를 추진
경작포기지의 임대세제 철폐	농지의 유효활용

■ 시사점

- 정부 발표 농업 개혁안은 JA와 자민당의 반대를 고려하여 개혁위원회 제시 안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으로 바뀌고 있어 개혁의 실효성이 의문
-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농협개혁을 개혁대상인 농협에 맡김으로써 아베내각의 개혁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미지수